

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(안) [’21~’25]

2023. 3. 29.

관계부처 합동

■ ■ ■ 목 차 ■ ■ ■

I. 수정배경	1
II. 정책여건	2
III. 제1차 기본계획 중간점검 및 평가	3
1. 주요성과	3
2.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	4
3. 수정안 주요 변경사항	5
IV. 비전, 목표 및 추진과제	6
V. 분야별 주요내용	7
1. 일자리 분야	8
2. 주거 분야	14
3. 교육 분야	19
4. 복지·문화 분야	25
5. 참여·권리 분야	31
VI. 향후계획	37
[참고]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	38

I. 수정 배경

- 청년기본법 제정·시행(20년)에 따른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21~25) 수립·추진 중
 - *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 (청년기본법 8조)
- '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,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' 라는 비전하에, 5대 정책분야, 20개 중점과제, 270개 과제 추진
-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(33개)·지자체(17개 시도)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중
 - 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의 원활한 안착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에 역점
 - * '21년 시행계획 청년정책 308개(일자리 115, 주거 24, 교육 88, 복지·문화 50, 참여 31)
- 새정부 출범과 코로나 19 상황 개선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를 따라 기본계획 수정·보완 필요
 -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한시사업* 정상화, 신규 정책수요 반영 등 계획과 집행간 정합성 확보
 - * ▲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▲ 특별고용촉진장려금 ▲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
 -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청년 국정과제와 연계성 강화
 - * 윤석열 정부는 '청년'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, 희망·공정·참여 기조 아래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 반영
- 부처 협의와 청조위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

※ 수정 추진경과

- 제1차 기본계획 수정 추진계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(제8차, '22.12.22)
- 기본계획 수정 TF* 구성('23.1.13), 청조위 민간위원 위크숍(2.28)
 - * 국조실 청년정책기획관(팀장), 고용·국토·중기·복지·교육·문화·행안·기재부, 금융위
- 기본계획 수정(안) 전부처 및 청조위원 의견수렴
- 분야별 청조위 전문위 개최(3.13~3.17)
- 청조위 실무위원회 심의·의결
-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·의결

- 1 -

II. 정책여건

◇ [청년 삶 여건] 경기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복합위기 직면

- 기업들의 채용규모 축소, 디지털 비대면 가속화, 경력 수시 위주 채용 트렌드 등으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
 - * ▲ 졸업(중퇴)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: '20년10.0개월 → '22년10.8개월
 - ▲ 첫 직장 1년 이하 계약직 비중 : '20년28.1% → '22년29.5%
 - ** '23년 취업자 증가폭 축소(81만→10만) 전망('23년 경제정책방향, 기재부)
- 고물가·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생활비 상승 및 채무부담 증가
 - *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'15년16.8% → '22년37.1%(전연령대 1위)
 - *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7.9%('22년 주거실태조사)
-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·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,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·심리적 어려움 직면
 - * 연소득 대비 수도권 주택가격 비율(PIR) : '17년6.7% → '21년10.1%
 - ** 청년층 주식투자 중독 상담 건수 : '19년591건 → '20년1,047건 → '21년1,627건

◇ [격차 확대] 부모배경지역 등에 따른 청년 내 격차·기회불평등 심화

- (자산격차)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야기, 향후 개인역량 직업 등 더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초래
 - * 상위 20% 청년, 하위 20% 대비 소득은 7.7배, 자산은 261배('21.12월, 통계청)
 - ** 청년의 90.1%, 불평등이 향후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('23.3월, 청년살 실태조사)
- (지역격차) 지방청년은 취업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 불가피, 반면 높은 주거비 등 어려움 직면
 - * '서울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자 스펙(연론 청년 인터뷰)

◇ [낮은 체감도] 청년정책 인식·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부족

- *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지도(40%), 만족도(33%) 저조(경기연구원)

- 청년들은 실질적 권한 부여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, 정부 조적 내부에도 청년의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증가

- 2 -

III. 제1차 기본계획 중간점검 및 평가

1 주요 성과

1 청년 문제를 독립적 국가정책 영역으로 제도화

- '일자리 중심 대차'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종합적·입체적 접근 시도
-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, 청년의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 확대
 - *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, 270개 세부 과제

2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삶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

- (일자리) 고용장려금을 통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, 일하는 청년 고용보험 적용 확대
- (주거)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위주 공급과 청년층 주거급여 수혜 확대 및 한시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용 경감 노력
- (교육)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,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
- (복지·문화) 정신건강바우처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 증진 지원,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
- (참여·권리)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기준을 마련하고, 연차별 위원 위촉을 통해 청년참여 보장

3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반 구축

- 중앙부처(45개) 및 지자체(17개 시도)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및 중앙·지방 청년정책 협의회 정례화
 - ※ 청년정책 관련 주요부처(9개)에 전담조직 설치
-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및 청년DB 구축 등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

- 3 -

2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

1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 청년 참여 미흡

- 정책 수립·운영과정 전반에 청년 참여기회가 여전히 제한적*이고, 정부 정책에 청년세대 인식·요구 반영하는 노력 부족
 - * 전체 857개 중 190개에 불과('22.2월, 제6차 청조위)
- 청년의 현재 어려움에 대한 사후적 일시적 대처에 치중함으로써, 미래 대비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청년세대 참여 미흡
-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회 제공이 부족하고, 지역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

2 정책에 청년의 인식·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

- (일자리) 단기 실업해소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한계
 - * 청년고용 양적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, 청년의 취업 지연현상은 악화(졸업 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: '20년10.0개월 → '22년10.8개월)
- (주거) 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내 집 마련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공공분양·임대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필요
 - * 청년의 91.3%가 자가주택 소유 필요성 인식('23.3월, 청년살 실태조사)
- (교육) 인재양성 사업의 범정부적 전략 체계 부족으로 첨단분야 인재 수요-공급간 미스매치 심화
- (복지·문화) 청년희망적금 등 자산형성제도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수혜 범위는 제한적이며, 고립·은둔 청년 등 지원 사각지대 존재

3 인프라 부족으로 체감도 저하

- 부처별·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 정보제공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계 기반 미흡
-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부재로 청년에 특화된 연구결과 축적이 어렵고 정책발굴, 실태 통계 관리 등 근거 기반 정책 수행에 한계

- 4 -

1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 확대·실질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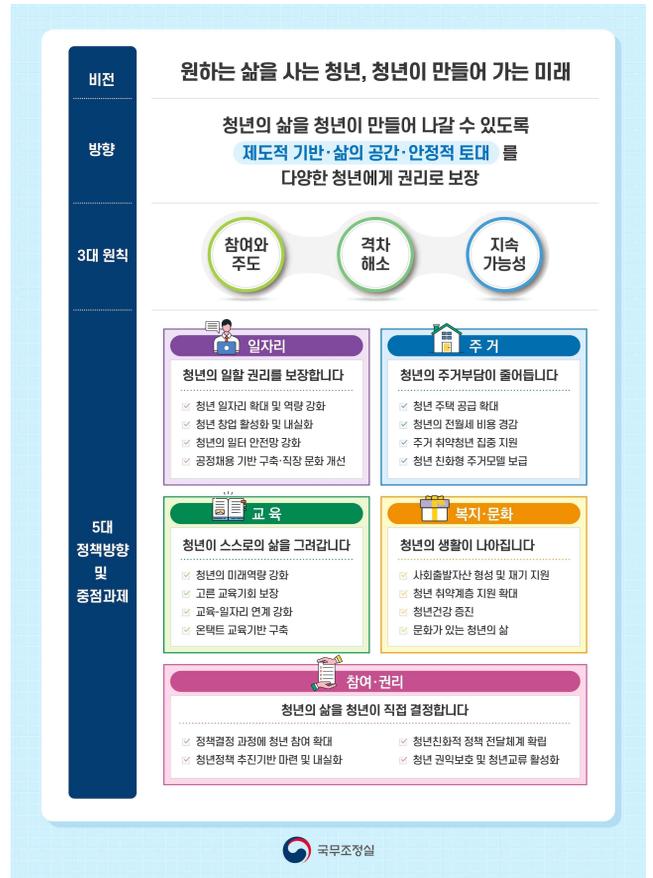
-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, 청년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(10% 이상 → 30% 이상)
- 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
 - * 9개 기관 → 24개 기관

2 청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, 정책의 효능감 제고

- (일자리) 단기 실업대책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의 진로탐색과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
 -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* 등 청년친화적 고용기반 확립
 - * 채용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· 정부 지원근거 신설 등
- (주거)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 나가되,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사다리 복원, 주거선택권 강화
 - * 공공임대: 기존(-25년) 16.7만 → 확대(-27년) 24만 · 공공분양: 기존(-25년) 기본계획 미반영 → 신축(-27년) 34만
- (교육)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노력을 지속하고, 인재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*
 - *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 추진 · 지역-교육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인재 양성
- (복지)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고,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·지원 강화

3 인프라 보강 통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

- 온·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정책접근성 제고
- 청년DB 내실화,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청년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추진기반 강화
-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기반 조성



V. 분야별 주요내용

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1. 일자리

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.

- 코로나19 극복 위해 '25년까지 128만명+α 청년구직자 지원 **3차연장**
-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**지속**
-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순주기 지원체계 강화 **지속**
- ▶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(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+α 지원 등) **연대 + 신규**
- ▶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**신규**

2. 주거

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.

-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
- 청년 43.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**지속**
-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% 감축 **지속**
- ▶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 (-27년, 58만호) **연대 + 신규**

3. 교육

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.

- 자소특성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**지속**
-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 10만 양성
-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**지속**
- ▶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**연대**
- ▶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접근성 강화
- ▶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**신규**

4. 복지·문화

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.

- 희망저축계좌 I, II 신설로 '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
- 취약청년 긴급자금: 5,000억원 지원(-'25년)
-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**지속**
- ▶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**신규**
- ▶ 취약청년 긴급자금: '25년까지 8,000억원 지원 **연대**
- ▶ 고립·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·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**연대**

5. 참여·권리

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.

-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% 달성
-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**연속**
- ▶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 **연대**
- ▶ 청년 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**신규**

1 일자리 분야

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.

- ◆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(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+α 지원 등)
- ◆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
- ◆ 청년창업 기술중심·민간주도 전환 및 순주기 지원체계 강화

1.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⇒ 취업의 문을 열겠습니다

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

-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
 - (재학생) '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' 신설, 심층상담 기반 진로 탐색 및 혼란·일경험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
 - * '23년 10개 내외 대학 선정, 시범 운영 → 성과평가에 따라 '27년까지 지속 확대 추진
 - (NEET 청년) '청년도전지원사업' 규모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*, '청년도전준비금**' 신설
 - * ▲(규모) '22년 7천명 → '23년 8천명 → '27년까지 지속 확대 추진
 - ▲(프로그램) 단기(1~2개월) 위주 → 중·장기(5개월이상) 특화프로그램 신설 등
 - ** (現)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→ (改) 단기프로그램 50만원, 중·장기 최대 300만원
 - (여성청년) '여성세로일하기센터'(전국 159개) 중심 구직여성 컨설팅,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(전국 80개 센터) 및 지원체계 강화
 - * 청년 구직여성 대상 컨설팅, 재직여성의 직업의식 제고 및 장기적 경력개발 설계
- 청년구직자 지원제도 내실화
 - (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) 청년의 안정적 구직활동 및 조속한 취업 유도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소득 인정수준 확대 등 지속 개선*
 - *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원
 - ②(現)구취수당 지급 중 58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지급 정지 → (改)소득에 따라 감액

- (취약청년 고용장려) 장기실업, 구직단념 등 취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지원 수준 **상향***

* 중소기업이 취약청년 고용시, (22) 1년 최대 960만원 → (23) 2년 최대 1,200만원

○ 세계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유도

- 청년고용시 우대 공제액 **상향**(23년^상), 일자리 창출 기여 중소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

② 취업역량 제고 지원

○ 청년수요 반영 일경험 활성화

- **민관협업**을 통해 분야별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을 지속 **확대**하고 (22년 4.2만 → 23년 **5.7만**), 청년-기업 맞춤형 매칭도 지원

- 중앙행정기관 신규 채용(25년까지 총 1만명 이상) 등 공공부문 청년 인턴 채용 대폭 **확대*** 및 내실화(22년 2.1만 → 23년 **2.7만**)

○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

- K-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를 **신기술 전반으로 확대***하고,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(K-Digital Platform) 확대(22년 20개소 → 23년 35개소)

*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(K-디지털 트레이닝) : 22년 22만명 → 23년 **3.6만명**

- 기업이 **ESG 경영 차원**에서 청년 대상 직무훈련,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, **운영비 일부*** 및 **컨설팅 지원**

* ▲ 300인 미만 중소기업: 자율 부담 ▲ 300인 이상 대기업: 50% 매칭 지원

- 산업분야 **융·복합 과정 확대***, 프로젝트 및 실습 등 **현장 특화 훈련과정 활성화**** 추진

* (22) 사물인터넷·빅데이터·SW·3D프린터·드론 등 5개 분야 → (확대) 친환경자동차

** (22) 융합마스터 기술자 양성 등 32개 과정 → (개선) 3D프린터 운용실무 등 36개 과정

③ 청년 재직자 지속 지원

○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

- ① **청년내일채움공제**(2년, 1,200만원), ② **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**(3년, 1,800만원)

-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**상향** (150 → 200만원)

○ 기업의 책임성 강화* 및 청년 보호**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
*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자부담 확대 : (22년) ▲(30인 미만) 면제 ▲(30~49인) 20% ▲(50~199인) 50% ▲(200인 이상) 100% → (23년) 기업 자부담 100%

** 기업측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최대 100%까지 지급(23년)

2. 청년창업 활성화·내실화 ⇒ 창업,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

①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: 아이디어 발굴→교육·사업화→자금→재창업



- (발굴) 부처 합동(도전! K-스타트업) 및 디지털 분야(K-디지털 브랜드 캠페인식) **창업경진대회** 개최, 우수 **아이디어 발굴** 및 **창업붐 조성**

* 민·관·지역 합동 경진대회 개최 및 선정기업 집중 지원 → ICT 분야 대표 스타트업 발굴

- (교육·사업화) **창업 아이디어를 실현**할 수 있도록 **다양한 지원** 제공

【 창업교육, 사업화 지원 주요사업 】

- ▶ (청년창업사관학교) 민간투자 중심의 **민간주도형 청창사 확대**(~25) * 22년 1개소 시범도입 → 23년 2개소 추가(총 3개소) → 25년 **총 6개소**
- ▶ (글로벌 창업) 창업, 준비·초기단계 기업에 **해외진출 지원** * 글로벌 창업사관학교(매년, 60팀), 글로벌 엑셀러레이팅(매년, 100개사)
- ▶ (TIPS) 창업기획자, 초기전문VC 등으로 구성된 운영사가 **先투자한 창업기업** 대상으로 **R&D 및 사업화자금 등 매칭 지원**(22년 500개 → 27년 **1천개**)

- ▶ (메이커 스페이스) 교육 중심 일반랩은 민간 자율운영으로 전환(23년~), **제조 창업에** 효과적인 **민간랩과 전문랩 중심의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** 지원 확대(~25년, 10개)
- ▶ (청년 특화 창업지원) 기술기반 청년 전문·특화 창업·스타트업 프로그램 확대 *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(年 120명),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(年 30명)
- ▶ (창업중심대학)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**창업중심대학**으로 추가(23년 3개) 지정하고, **대학발 창업 활성화** 및 **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**
- ▶ (캠퍼스 혁신파크) 대학(원)생과 기업을 연계, **대학 내 창업공간** 등 조성 * 강원대(바이오), 한남대(ICT, 기계·금속), 한양대메리카(IT·BT·CT 등) 등 7곳 선정
- ▶ (청년 리딩그룹) 데이터·AI 바꾸어 지원시 청년기업 우대 → **데이터·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**에 도전하는 청년기업 **발굴**(23~25년, 600개 기업 발굴)

- (자금 공급) '25년까지 **청년 창업자금 7.5천억원**(기업당 1억) 지원 및 **펀드 조성***, **청년창업기업 신규보증**(연간 5천억원) **공급**

* ▲ 혁신창업펀드 7.5천억(~25년) ▲ 청년기업 특화펀드 320억(~26년)

- (재창업) 사업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(예비) **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, 성장촉진** 등 지원(청년 다시-Dream)

* 재창업 사업화자금(최대 1.5억), 교육·멘토링,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

②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

- (농·어업) **청년 농업인 3만명**(~27년) **육성** 및 **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대**(4→15개소, ~27년), **청년 어업인 창업 지원**(23~25년 4,000명 이상)

- (소상공인) 전통시장내 **청년점포**(복합청년몰 등)에 대한 교육, 마케팅, 온라인 진출 지원 등 **청년 상인 경쟁력 제고**위한 지원 **강화**

- 청년·영세소상공인 등에게 **공공임대 주택내 상가**를 **주변시설 이하**(감정가 50~80%)로 **최장 10년간 제공**(25년까지 年 80실 이상)

- (문화·콘텐츠) 전통문화 분야 **활동비·창업 교육 등 제공**(23~25년, 400팀 이상), **게임 산업 청년 창업자 지원**(23~25년, 120팀)

- (환경) 국민체감형 **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**(年 25개 과제) 및 **예코 스타트업 지원**(年 150개 기업) 등 환경분야 **청년창업 생태계 구축** 지원

3. 공정채용 기반 구축·직장 문화 개선 ⇒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

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

○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

-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'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' 마련 등 **공정채용 관리**활동 강화

○ 공정채용문화 확산

- (공정채용법)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 '채용 절차법'을 '공정채용법'으로 **전면 개정*** 추진

* ▲ 채용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▲ 정부 지원근거 신설 등

- (능력중심 채용모델) 미래 채용수요, 동향 분석을 토대로 **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·고도화**

- (맞춤형 컨설팅) 중소기업 대상으로 **공정채용제도** 및 **체계적인 선발 프로세스** 안착을 위한 **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**

- (지도점검) 채용절차법상 규정 준수여부 점검 → **법적 조치**(과태료 또는 시정명령) 및 **개선 안내**

○ 권리구제 확대

- 일방적 채용취소, 경계 등 기업의 불이익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**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*** 제공

* 채용내정취소 사건에서 징계, 해고 등 모든 사건으로 확대(22년 24건 → 25년 900건)

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

- (청년친화 중소기업 선정·지원) 청년이 선호하는 **근로여건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**(年 5백 개소) **홍보**하고, 사후관리 강화*

* 선정기업 지속 모니터링 → 임금체불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취소

- (일·생활 균형)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,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통해 일·생활 균형 분위기 확산('23~'25, 1.4천억), 재택 등 유연근무 확대
 -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폭 확대('20년 4,333개 → '25년 6,200개)
- (성평등 문화 조성) 부모 맞벌이 문화 확산하고, 경력단절 없이 출산·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성보호제도 개편* 추진('23년)
 - *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연형(만8세 → 만12세 이하)·기간(24 → 36개월) 확대 등
 -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(年 40개사) 등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

4.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⇒ 일터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

1)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

- (고용보험) 국제소득정보와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,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방안 모색
 - *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(20.12월)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('22.1월)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('22.7월) 고용보험 추가 적용
- (산재보험)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도 시행 및 적용직종 구체화, 노무제공형태, 산재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범위 확대 추진
- (표준계약서)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*
 - * 마트배송기사, 가전설치 기사 등 현장수요 높은 직종 중심 제·개정안 마련 추진(~'25)

2) 청년 노동권익 보장

-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근절
 -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(전국 10개소), 고용평등상담실(전국 20개소) 운영을 통해 법률·심리상담 제공 등 피해자 보호·지원 지속 추진
 -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로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인식 확산
- 불법·부조리 근절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
 - 청년이 많이 일하는 분야 중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많은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집중 실시,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병행

- 주거유형에 따라 시세 50~95% 수준으로 제공하고, 학교·직장 인근 + 빌트인 가전* + 주요마감재 분양주택 수준까지 상향
 - * 책상·냉장고·전자레인지·세탁기·에어컨·불박이장·무인택배함 등

【 청년특화주택 4.38만호 공급 】

- ▶ (일자리 연계형) 중소기업 근로자,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+문화+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하브로 활용(2.74만호)
- ▶ (역세권 리모델링형) 도심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급(1.29만호)
- ▶ (기숙사형)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+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(3.5천호)

※ 주요 사례

일자리연계형	역세권 리모델링형	기숙사형
		
▶ 판교 2벨리(창업지원주택) ▶ 기업지원하브 성장센터 등 연계	▶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공유 오피스 등 있는 세이브하우스 공급	▶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호 ▶ 건국대(6년), 세종대(7년)

2)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

-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*
 - * ('22) 9개소 → ('25) 18개소 → ('27) 30개소
 - 대도시 내 국·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확대 추진
 - 공공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대학 내 행복기숙사 확충 및 국립대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 등 추진
- 기숙사비 카드 및 현금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기숙사 확대*
 - * 기숙사비 납부 선택제도 시행 기숙사수 : ('22) 152개소 → ('25) 182개소

2 주거 분야

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.

- ◆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(~27년, 58만호)
- ◆ 청년 43.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
- ◆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% 감축

1.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⇒ 직장·학교와 가까운 집이 늘어납니다

1)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대폭 확대

- (뉴·홈 공공분양) 나눔형·선택형 분양을 도입해 부담을 낮추고, 청년 특공·추첨제를 신설하여 통해 청년층 물량 확보(약 34만호, ~27년)

【 뉴·홈 공공분양 】

- ▶ (나눔형) 시세 70%이하 분양가로 공급 (총 25만호 중 청년층 19.1만호)
 - 의무 거주기간(5년) 이후 공공에 환매시 매각 시세차익의 70% 귀속
- ▶ (선택형) 임대거주(6년)후 분양여부 선택 (총 10만호 중 청년층 6.4만호)
 - * 나눔형·선택형 물량 15%를 미혼청년에게 특별공급, 일반공급 물량 20%에 추첨제 도입
 - 공공분양 공급시 분양가의 최대 80% 대출 가능한 초장기(40년) 전용모기지*를 통해 초기부담을 완화하고,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
 - * ▲(나눔형) 최저 1.9% 고정금리, 최대 5억원 ▲(선택형) 최저 1.7%, 최대 3억원
- (공공임대)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신규 공공임대를 꾸준히 공급(청년층 年 48만)하고, 공급방식(임주자각, 거주기간 등)도 개선
 - 면적 확대, 시설개선 등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하고,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 특화단지 조성 등 추진
- (청년특화주택) 도심 등 선호입지 내 청년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 총 4.38만호 공급(~25년)

2.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⇒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줄어듭니다

1)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

- 20대 미혼청년이 학업·구직 등을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
 - * ('21) 월평균 15.4만원, 3.1만가구 → ('25) 월평균 17.5만원, 3.5만가구(예상)

【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】

- ▶ A지역 거주 부모(2명) + 서울 거주 청년(1명)로 구성된 3인 가구
(現) 부모+청년(A지역 3인) : 월 22.0만원
⇒ (改) 부모(A지역 2인) : 월 18.5만원, 청년(서울 1인) : 월 33만원

- 선정기준 확대(기준중위소득 ^{'21년}45% → ^{'27년}50%) 및 기준임대료 개선 ('22년 대비 '23년 최대 1.1% 인상) 등을 통한 보장수준 지속강화

2)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
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~'24년, 약 15만명) 및 저금리 전·월세 자금 대출 지원 (年 8만명)
 - *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: 전세자금 대출(1.5~2.1%), 월세대출(보증금 1.3%)
-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+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 모두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운영
-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 완화*('23년)
 - * (기준) (연소득 4천만원 이하) 50% 할인, (연소득 4천~5천만원 이하) 10% 할인 → (변경)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, 신혼부부 60% 할인

3. 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

⇒ 청년당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

1) 고시원·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

- 고시원·쪽방·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
 - 보증금(50만원 용자) + 이사비·생활필품(40만원) 등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

	기 존	개 선
주거환경		
주거면적	0.5 ~ 2평(1.65㎡ ~ 6.6㎡)	4.84평(16㎡)
월임대료	평균 22만원	5만원(보증금 무료)

②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

- 반지하주택 매입후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·리모델링
 - 열악한 반지하주택 중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 급여(도배·장판·창호 등 교체지원, 최대 1,241만원)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추진
- 불법 건축물 감독관 운영, 대학·역세권 인근 집중 단속
 - 불법대수선 시 이익을 강력히 환수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상향,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신설 등 제도 개선 추진
 - *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개선 방안 및 건축법령 개정 추진('23.下)

③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

- (허위매물 단속 강화) 온라인 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등에 대한 단속·제재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
 - * 명시의무 정보 누락, 거래불가 대상물 광고 등 규정 위반 광고 모니터링(年 1천건 이상)
- (전세사기 피해 예방·지원)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를 위한 법령 개정(주택도시보증법 등, '23.下)
- (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) 대학가 포함 청년 다수 거주지역 등에서 공인중개사의 규정 준수 여부* 점검 지도 강화
 - * *확인설명 의무 이행여부 ▲부동산 거래신고 위법여부 ▲중개보수 및 실비 상한 초과여부 등

4. 청년 친화형 주거모범 보급 → 청년의 목소리를 집에 담겠습니다

①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

- (펀드 투자) 펀드조성을 통해 도심 내 공유주택* 운영 또는 공유 서비스 제공 기업 등에 투자, 공유주택 활성화 지원
 - * 개인독립 공간(침실)이 있고 주방·세탁실·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은 공유형태
- (제도기반 마련)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고 관련 건축기준 마련('23.上)
 - * 건축법령 개정, 기숙사 건축기준 신설 등

② 청년의 지역 안착 + 국가균형발전 도모

- (도심융합특구) 지방 광역시(5곳) 도심에 산·학·연·관이 융합된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
 - * 5개 광역시에 순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
- (지역활력타운) 지방에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인구유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·생활인프라·서비스가 복합된 타운 제공
 - * 매년 신규 사업대상지 7곳 이상 선정
- (보증자리) 농촌 청년가구 대상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및 공동육아, 문화·여가 등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확대
 - * ('23) 9개소(누적) → ('26) 35개소

3 교육 분야

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

- ◆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
- ◆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출발선 공정 보장
- ◆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

1.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→ 청년이 변화의 중심에 섭니다

① 핵심 첨단분야 범정부 인재양성 기반 구축

- 인재양성전략회의(의장:대통령) 출범('23.2월) →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('23.2월)을 토대로 핵심 첨단분야*별 인재양성방안 마련
 - * D(디지털) 발표, '22.8.22), A(항공우주), B(바이오헬스), C(첨단부품소재), E(환경에너지)
- 인재양성 정책을 체계적·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등 인재양성 3법 제정 추진(~'23)

②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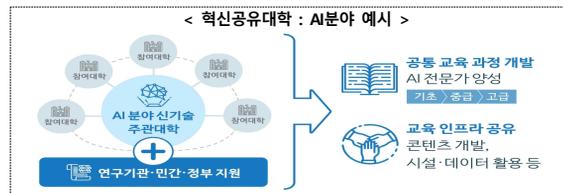
- 신산업·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('22년 420억 원 → '23년 1,052억 원)
 - * ('23) 8개 부처, 16개 분야 → ('24-) 성과분석·통한 지원분야 조정 및 지원확대

③ 부처별 특화분야 인재양성 지속 추진

-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석·박사 청년인재양성(~'25, 2만명) 등
 - * ▲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(산업부) : 年 4천명 이상
 - * ▲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(과기부) : '23년 3,385명 → '24년 4,100명 → '25년 4,500명 등
- 환경산업분야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(年 3천여명)
 - * 고급특성화대학원 - 전문실무면제 전문인력 - 실무특성화고 양성인력
- 문화관광·미디어·지식재산(~'25, 5,800여명) 인재 및 리더 양성
 - * ▲콘텐츠 창의인재(年 400명) ▲문화관광('23~'25년 2,500명) ▲게임(年 120명) 등

④ 대학의 핵심인재 양성 허브역할 강화

- 혁신공유대학 확대
 - 대학 간 공유·협력으로 교육과정 공동개발, 전공과 무관한 교육기회 제공
 - * (21) AI, 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, 에너지산업 등 8개 분야 컨소시엄 선정(총 46개교) → ('23) 5개 분야(반도체 포함) 컨소시엄 추가 선정 → ('24-) 분야 지속 확대 추진



○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(LINC 3.0)

- 산학연협력 요소* 종합지원 및 지자체·대학 간 연계·협업 강화를 통해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(일반대 76교, 전문대 59교) → RISE로 통합('25)
 - * 인재양성, 인프라 구축, 기술이전·사업화, 취창업, 공유협업 체계 마련 등
- 대학의 자율적 혁신지원을 위해 국립대·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* 확대
 - * ▲(대학·전문대 혁신지원) 1교당 평균 지원 단가 대학 49 → 69억, 전문대 39 → 54억
 - * ▲(국립대학 육성)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88억원 → 124억원
 - * ▲(지방대학 활성화) '23년 신규 예산 지방대 1,900억원, 지방 전문대 600억원

2. 고른 교육기회 보장 → 청년이 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

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

-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
 - (국가장학금) 서민·중산층(5~8구간) 지원단가 확대 및 기초 차상위 지원 한도 인상('22년-) → 취약계층 중심 제도개편 지속추진
 - * ('21) 年 520만원 → ('22) 첫째 年 700만원 상한, 둘째 이상 전액

- (학자금대출) 저금리 기초(23.1학기, 1.7%)를 지속 유지하면서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*
 - * ▲(대출대상) 취업우선형특수·전문대학원생, 일반성원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
 - ▲(자립준비청년)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ICL 지원 및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
- (근로장학금)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지원 지속 확대
 - * 지원 금액 및 인원 : (20) 3,182억원(11.9만명) → (23) 3,677억원(12.1만명)

○ 사회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인재 장학금 확대

- 중소기업·중견기업 및 농업분야 취·창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(전액)·취업 준비금(200만원) 지원
- 인문학·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 확대
 - * ▲인문·사회(인문100년장학금) : 年 4천명 이상 ▲예술·체육(예술체육비전장학금) : 年 1.2천명 수준 ▲전문기술인재장학금 : 年 1.2천명 수준

②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

-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속 지원 (年 1.1만명)
-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

③ 지역인재 양성 지원

- (지역혁신 플랫폼, RIS)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기관(기업·연구소 등) 연계·협업 하에 지역혁신·인재양성·일자리 창출 등 뒷받침(23년 3,420억)
 - * (기존) 6개 → (23년) 3개 신규 선정
- (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* 구축)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
 - * RISE(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)
 - '23~'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도입 확산 추진

- (직업교육 혁신지구) 직업계고-지역기업(취업)-지역대학(신화·후학습)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
 - ※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(안) : (21) 5개 지구 → (~26) 17개 지구(누적)
- (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)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-전문대학간 대학생 현장실습, 기업 R&BD 등 다양한 차원의 연계·협력 추진

3. 교육·일자리 연계 강화 ⇒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일터로 이어집니다

①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안착 지원

- 직업계고 운영 및 현장실습 내실화
 - 신기술분야 훈련프로그램 지원 확대* 및 신산업·신기술·지역전략 산업 분야 중심으로 학과 개편 지원
 - * ▲지원학과 확대: 40개 학과 → 55개 학과, ▲지원기간 연장: 3년 → 5년
 - 고품질 현장실습처 지속 발굴* 및 실습생·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,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(~25년 3천명) 등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
 - *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 등록(누적) : (20) 2.6만개 → (25) 3만개
-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
 -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(20년~)을 통한 시도취업지원센터(18개소)와 일자리 유관기관*간 협력 지원 등 지역중심 고졸 취업지원 기반 강화
 - * 지자체, 지방 고용노동지청·중소벤처청·인적자원개발위·산업인력관리공단·산업단지공단 등
 -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속 지원(年 2만명, 1인당 5백만원)

② 민간협업 청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

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(학부 중심 → 석박사 과정), 반도체 등 첨단분야 지원 강화
 - * 지원규모: (22년) 15개교, 180억 → (23년) 19개교, 267억

4.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⇒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이 가능해집니다

① 온라인 지식공유체계(K-MOOC) 강화

- 신산업·신기술 분야* 강좌, 국내·외 석학강좌, 글로벌 우수콘텐츠 등 공유 + AI·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 강좌 제공
 - * AI 등 4차 산업혁명 강좌 : (21) 127개 → (22) 154개 → (25) 200개 이상
-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+ 학점 취득, 취업, 직무연수 등 활용

②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

- 대학강좌, 코딩·그린·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·통합하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 마련
- 학습자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 제공 + 이수결과를 청년들이 학점·학위취득, 취업·고용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 지원



③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

- 권역별 '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(10개)' 지정·운영(20~)을 통한 원격 교육 수업 질 제고,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 지속 추진

- 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교육과정 제공(부트캠프)
 - 대학+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학 내 단기집중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수학생에게 마이크로 디그리(소규모 학위) 부여
 - * 기본계획 수립 및 대학 선정 추진(23년)
- 산업 맞춤형 단기직무 인증과정 확대 운영(배치業)
 - 기업·교육기관 공동으로 개발·운영하는 신산업 분야 맞춤형 직무역량 과정을 확대하고, 프로젝트·인턴십 등 심화 실무과정 신설(23년)
 - * ▲(과정) 22년 9개 분야 44개 과정 → 25년 최대 12개 분야 96개 과정
 - ▲(방식) 현행 기초과정(지식·이론 중심 온라인) → 개인·심화과정(프로젝트 기반 온오프라인) 추가

③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

- 진로탐색 학점제를 확대하고, 대학-기업 협력 下 '기업 탐색 - 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- 취업 연계'(WE-Meet) 원스탑 모델 운영*
 - * (23년) 혁신공유대학 참여 13개 컨소시엄 대상 운영
- 폴리텍·전문대 등과 연계를 통해 고졸청년(도제학교·특성화고 졸업생 등)이 기업 핵심인력으로 정착·성장하도록 후학습(경력개발) 지원
 - * 고속권 일학습병행(P-Tech) : 60개 대학(폴리텍 27, 전문대학 33)
-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
 -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(23년 179개교 → 25년 182개교)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(23년 82개교 → 25년 88개교) 참여대학 확대
 - 자기개발비용지원 지속 확대(인당 평균 지원금액 : 22년 10.4만원 → 23년 12만원)

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

- ◆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
- ◆ 취약청년 긴급자금 : '25년까지 8천억원 지원
- ◆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·지원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◆ 문화콘텐츠 분야,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 지원

1.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⇒ 청년의 첫 출발이 든든해집니다

1)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개편

- (청년도약계좌)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설('23년)

【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】

- ▶ (가입대상)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 - * 개인소득 6,000~7,500만원 청년 대상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교세 혜택만 부여
- ▶ (혜택) 소득구간별 매칭비율 차등 설정(최대 6%),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교세 혜택
- ▶ (상환반기) 5년(월 최대 납입액 70만원)

- (청년내일저축계좌)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I·II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

【 희망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내용 】

- ▶ (희망저축계좌 I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기준중위소득 40%) 대상,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(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)
- ▶ (희망저축계좌 II) 추가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(기준중위소득 50%) 대상,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(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시 지원금 전액 지급)
- ▶ (청년내일저축계좌) 연간 근로·사업소득 600만원 ~ 2,400만원 이하, 중위소득 100% 이하 대상,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
 - * 수급자·차상위자는 연간 근로·사업소득 기준 면제, 1:3 정부매칭지원

- (병사지원) 병사 봉급(월 67~150만원)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(월 14만원 → 55만원)을 '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

2) 청년 부채 부담 경감

- (햇살론^{youth})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·저신용 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(3.6~4.5%) 지속 지원('25년까지 8,000억원 이상)
 - *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청년(취준생·사회초년생 등) 대상 1인당 최대 1,200만원 지원
- (생활비 지원)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취업준비금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설계 및 추진('23년)
- (채무조정 강화) 저신용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·재기를 위해 선제적 이자를 감면, 원금 상환유예* 등 청년특례프로그램 운영
 - * 채무과중도(소득, 재산 감면)에 따라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감면(30~50%)
 - **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(0~3년) 저신용 청년 이자율 3.25% 적용(기존 최대 15%)
- (금융교육) 청년들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창업·취업, 주거·마련, 학자금 등 청년층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콘텐츠 개발·제작
 - 금융감독원 등 금융교육기관 및 온라인을 통해 금융교육 실시

2.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⇒ 어려운 청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

1)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

- (경제) 자립수당(月35만 → 40만원), 지자체 자립정착금 인상(800만 → 1,000만원), 디딤씨앗통장 제도개선* 및 의료비 지원사업** 신설 등
 - * 만 24세 도달 시 별도 해지 절차없이 자동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 - **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('23년)
- (주거·일자리·교육)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*, 고용센터·자립지원 전담기관간 협업*² 맞춤형 취업지원, 대학생 지원 강화** 등
 - * 공공임대 年 2,000호 우선공급, LH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 확대(20세 → 22세 이하)
 - ** 대학생 학자금(생활비) 대출 무이자 지원 대상 포함,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
- (맞춤형 지원) 시·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소득·주거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지속 확대*
 - *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및 사례관리 지원 인원 확대

2)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·은둔청년 발굴·지원체계 구축

- (가족돌봄청년) 지자체·학교 등 활용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신설('23년)

【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】

- ▶ (추진방향)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청년 본인의 도약 기회 보장
- ▶ (주요 서비스(안)) (기본서비스)가족돌봄청년 가구 가사·간병 지원 서비스 (추가서비스)청년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통합(package) 제공
- ▶ (추진체계) 지자체 기획발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

- (고립·은둔청년) 실태조사* 및 고위험군 발굴·지원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전담인력 배치
 - * 고립·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 통해 상세실태 파악 ('23년)

3)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

- (위기청년) 가정·학교밖 청년(19~24세)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·교육서비스 제공
 - 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지원 강화, 정규교육 소외 청년 대상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
- (청년한부모) 저소득 청년한부모(25~34세)에게 아동양육비(월 5~10만원)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
- (이주배경) 다문화·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·진로·직업교육, 이중 언어 인재 발굴, 상담 등 지원
 - 이주민 밀집지역 중심 지역자원 연계사업 확산('21년2개 → '23년5개)
- (청년1인가구) 가족센터(전국 244개소) 중심 지자체·민간단체 협업 체계 구축, 심리상담·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*
 - * 지원사업 가족센터 확대('22년12개 → '23년36개)

4)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

-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인력* 및 학습도우미 지원, 원격수업 수강지원 등
 - * 수어통역사·점역사·속기사 등 (~'25, 2,700명)
- 장애학생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, 사회통합 프로그램, 배리어프리 영화제 등 대학 자체 계획 프로그램 지원
-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(年 1.4만명) 및 발달 장애인(19~24세)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* 운영
 - * 전국 25개소(16개 시도), 5개 분야 82개 과목 교육 프로그램

5) 대중교통비 지원

- 청년층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*의 회당 마일리지 적립(최대 450원 → 650원) 및 월 적립한도(44 → 60회)를 확대한 '알뜰교통카드 플러스+' 출시('23년)
 - *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·자전거 이동과 연계한 마일리지 지급 → 월 최대 1~4만원 절감

3. 청년건강 증진 ⇒ 청년이 본연의아 나라가 본연입니다

1)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

- (심리지원)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*, 고위기 청년(~24세) '집중 심리클리닉' 운영('23.3월-) 등
 - * 마음건강바우처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, 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 등 서비스 개선
- (중독) 청년을 마약·알콜·도박 등의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,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
 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층 알코올 등 중독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, 예방 홍보, 교육 등 수행

②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

- (프로그램) 17개 시도별 2개 내외 **청년사업단** 선정, 청년 눈높이에 맞는 **신체·정신건강 서비스 개발·제공**(~'25, 850명)
- (체육시설)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,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**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**
* '23년 신규 46개소(일반형 8개소, 장애인형 20개소, 근린생활형 15개소 등) 지원
- (식사지원) 시간 및 사회적 여건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**'천원의 아침밥'** 확대

4.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⇒ 청년의 도전, 문화강국의 시작입니다

① 문화콘텐츠 분야,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

- (인재양성) 문화콘텐츠 분야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* 육성을 위해 민·관·학 연계를 통한 교육·인턴십·창업 등 지원
* ▲ 공연예술분야(무대기술) ▲ 국악진흥 ▲ OTT-콘텐츠 ▲ 전통문화 창업 등
- (금융지원) 청년·중소 콘텐츠기업의 과감한 도전 지원을 위해 **'K-콘텐츠 펀드'** 등을 통해 **콘텐츠 제작자금 공급**
* '21~'25년 年 2,500억원(총 1조원) 규모
- (콘텐츠산업 육성)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콘텐츠산업 육성
 - (게임) 신기술(클라우드, 인공지능, VR/AR 기술 등) 기반 게임 제작지원(23년, 44억원), 게임기업 창업·스타트업 지원(23년, 50억원) 등
 - (대중음악) 대중음악 + IT 융복합 콘텐츠 상용화 지원(23년, 10개)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·홍보 지원(23년 22개)
 - (만화) 다양한 주제의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(과제수: '21년 155개 → '23년 165개)
 - (융복합)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**차세대 융복합 콘텐츠*** 제작 지원, **신수요 창출 통한 시장 활성화**
* ▲ 실감기술 활용 ▲ 국립문화시설 문화자원 활용(공공형유형) ▲ 민간지원(시장주도형)

- 29 -

② 청년 문화 활동 기반 강화

- 청년이 **문화생활을 자유롭게** 누리도록 뒷받침
 - (문화누리카드) 저소득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완화위해 모든 저소득층 청년(23년, 약 29만명)에게 **문화누리카드 지급**
* 문화예술여행·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(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)
 - (청춘마이크) **'문화가 있는 날'** 계기 **공연 기회 및 공연비** 등 지원*
* (23년) 400팀 → (24년) 450팀 → (25년) 500팀
 - (청년관광) 청년관광 공모전 트래블리그 운영, 인구감소지역 등 소도시 여행상품 개발 및 여행경비 지원
-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제공을 통한 **문화역량 강화**
 -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**인문가치**를 접목시키는 창의적 활동 지원(年 120팀 이상 발굴, 팀당 활동비 200만원 지원)

③ 청년 예술가 및 청년창작자 지원

- (창·제작 지원강화) 신진 청년 예술인 진입 성장 지원, 경험 숙련도 향상 등 창작역량 강화 기회 제공
* ▲ 예술대학생의 현장·행정 역량지원 ▲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▲ 생애첫지원 등
- 창작·창업 준비부터 제작·사업화까지 **단계별·다년간 지원방식 체계화**
* ▲ 만화콘텐츠 창작 ▲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 ▲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등
- (청년문화예술가 육성) 인적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**청년문화 예술가**들에게 창작준비·기획전시·발표 등 지원
 - 신진예술인 등(3,000명)에게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(생애 1회)
 - 문학, 시각, 공연(연극·무용·음악·전통), 다원예술 등 **7개 분야 차세대 청년예술가** 대상, 조사 연구 창작활동 지속 지원
- 문화콘텐츠 개발 및 청년 유튜브 등 **미디어 활동 지원**
 - 청년 대상 문화 소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등 **문화PD 활동 지원**(~'25, 700편)
 - 1인 창작자를 위해 도서관 등에 **소규모 창작공간 조성**(~'25, 180개소) 및 **디지털 광고콘텐츠** 제작비 등 지원

- 30 -

5 참여·권리 분야

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

- ◆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
- ◆ 온·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
- ◆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

1.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

⇒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합니다

①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대폭 확대

-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사·도·소 위원회(외교안보 사안 등 일부 제외)를 **청년참여위원회**로 지정
 -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**청년비율**은 **30% 이상**으로 지정
* (23년)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, 부처 및 지자체 청년참여위원회 신규 지정 → (24년~) 전체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중 확대

【 청년참여위원회 관련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 】

기 준	개 정
▲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* 중앙·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,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 50% 이상, 기타 10% 이상	▲ 위원회(외교안보 사안 등 일부 제외) 구성시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▲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30%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

-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**청년 정보풀(Pool)**로서 **청년DB** 구축('23.1월 개통)
 - 일반청년, 청년DB에 개인 프로필 등록 → 부처·지자체 청년위원 위촉 등에 적극 활용
-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**청년 참여제도 도입·운영**
 - 부처 내 **청년정책 소통창구** 역할을 위해 **청년보좌역** 채용 확대
* (22) 9개 부처 → (23)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
 - 부처별 **2030 자문단** 운영하여 **국정 전반**에 청년의 인식 직접 반영

- 31 -

-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**청년정책 공모전** 개최('23년)
 -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사업으로 추진

② 청년 친화적 거버넌스 운영

- 전 분야에 걸쳐 **청년 목소리 반영·환류** 시스템 안착
 - (청년제감 제고) 국민신문고(민원) + 국민생각함(정책제안) → 해당 부처에 **제도개선 권고**(상시) → 청년·대국민 알림
 - (청년 거버넌스) 다양한 **청년 네트워크** 확대 및 **공론장** 마련
- 사회 개혁과제 및 인구구조 변화·기후위기 등 **미래의제**의 논의 주제로 적극 참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

2.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

⇒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 기반이 탄탄해집니다

① 법령·예산 관련 청년정책 지원기반 확대·강화

- **청년참여 확대** 및 **인프라 보장** 등 법적 근거 마련하여 정책 뒷받침
 - **청년기본법 개정** 및 하위법령 개정·시행('23)
- 청년의 **구직활동에 걸림돌**이 되는 **불합리한 법령*** 개선
 - * ▲ 취업 및 자격 취득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▲ 필요 자격취득 성년 이전 응시 허용 등
 - 실무경력 인정범위 및 응시연령 법령정비('23) →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추가과제 발굴정비('24~'25)
- 청년문제에 능동적·탄력적으로 대응하는 **재원조성 방안** 강구
 - 재원조성 방안 연구용역('23) → 관련법령 개정 검토

② 근거중심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

- 종합적·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**연구기관 운영 검토**
 - △청년정책 특화연구 △정책·예산 분석·평가 △조사·통계 실시·관리 △청년관련 미래의제 개발·연구
* 청년정책 연구 추진체계 검토('23) → 관계법령 개정 추진

- 32 -

○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운 지표 마련

- 現 청년정책 관련 대다수 지표는 일자리·주거·소득에 집중 → 청년이 **지속가능한 입체적 삶**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 개발
- * 2년 주기로 실시하는 「청년 삶 실태조사」 결과를 통해 청년지표 개발(23) 및 활용

【 해외사례 】

- ▶ (아이슬란드)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**웰빙지표**를 토대로 **예산안 편성**. 웰빙지표는 기대수명, 건강, 평생학습, 안전, 노동시간 등 **일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** 고려
- ▶ (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) 국내총생산(GDP)을 넘어 **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** 등 새로운 측정지표의 필요성 강조(2018년 제6차 OECD 세계 포럼)

○ 청년통계 체계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청년정책 지원 강화

- (청년통계등록부) 청년층 가구·주택·취업활동 등의 주요 정보를 매년 연계·구축하여 지속적 시계열 분석
- ⇒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용 확대 기반 제공

【 청년통계등록부 항목 】

- ▶ (일자리) 취업 및 창·폐업, 종사상지위(상사·일용·자영업), 근무기간, 업종, 직업훈련 등
- ▶ (가구·양육) 가구구성(1인, 한부모 등), 혼인·출산, 맞벌이, 육아휴직 등
- ▶ (기 타) 거주형태, 주택소유, 1년 전 거주지, 다문화 등

- (청년층행정통계) 청년층 인구·경제·사회 부문의 입체적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

3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

- 청년친화도시 지정·운영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역 인프라 조성 (23년 운영방안 마련 → 24년 지정 및 운영)

【 청년기본법 개정안 관련내용 】

- ▶ (제24조의6) "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"

○ 정부-민간 Two-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

- (정부) 중앙부처-광역지사체 **청년정책책임관 회의*** 운영(분기, '21~)
- * 고용·주거·교육·복지 등 주요 시책 관련 현안 협의 체계
- (민간) 중앙-지방 **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교류회 등 운영**(23~)
- 지역여건과 청년의 특성에 맞춘 **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**
- 4개 권역별 지원(23) 및 성과평가 후 확대 검토

3.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⇒ 청년과 정책이 가까워집니다

1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

- (온라인)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편리하게 접근·이용
- 既운영 중인 플랫폼(온라인 청년센터)을 **개선·확대**해 일자리 서비스 등 각 부처·지자체 청년정책을 **연계, 정보 통합 제공**
-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(23년 구축계획 수립 → 24년 구축 → 25년 운영 개시)

(기존) 온라인 청년센터	(개선)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정책 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, 다른 분야 및 지자체 서비스 실시간 제공 어려움 ○ 청년정책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정책사업 제한적·한시적 지원 ○ 상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담원을 통해 분야별 심층 상담 제공하고 있으나, 이력관리 부재 ○ 인프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워크넷 서버 공동 활용, 기능 추가 개선에 한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정책 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자리 외 주거·복지·교육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 자동 연계·실시간 확인 ○ 청년정책 자가진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자리 외 분야까지 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○ 상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야별 상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○ 인프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도 클라우드 구축하여 서비스 개선 및 기능 신설 등 확장성 마련

- (오프라인) 청년에게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**체감도 제고**

- 중앙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청년지원센터 지정(23년) → 지역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**정책 서비스 질 개선**
- * 청년센터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·보급, 지역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

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

-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정착 지원, 지역관광 홍보·활성화,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하고 **실험적인 활동 확대**

- (청년마을) '23년 신규 12개소 지원
- (청년마을기업) '23년 25개소 내외 지원
- (청년두레) '23년 신규 20개소 지원
- (로컬크리에이터) '23년까지 130개팀 지원

< 청년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 >

청년마을	청년두레	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
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문경 달빛탐사대 -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창업·커뮤니티 조성 프로젝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포천 누구니투어 - 지역청년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주 도담스튜디오 - 페플라стик 활용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·판매

4.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⇒ 청년의 권리, 청년이 지킵니다

1 노동·금융·주거 청년권익 보호

- 청년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나 **정규교육의 사각지대**에 있던 **노동·금융·주거** 등에 대한 **상담·교육** 통해 피해 예방
- * ▲(노동) 임금체불, 작업장 폭력 등 ▲(금융) 불법금융, 대출사기 등 ▲(주거) 강동 전세 등
- (오프라인) 근로권익센터, 금감원, 서민금융진흥원, 전세사기 예방센터 등 **협업 강화** 및 **청년 접근성·인지도 제고**
- (온라인) 웹(PC·앱·모바일) 교육콘텐츠 제작·배포
-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·운영 확대 등 청년의 **인권보호·권익향상** 위한 **제도 개선**

2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

-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서 **탈피, 청년이 주체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뒷받침**
- **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청년 국제교류 지원**
- *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, 국제 청년서밋
- 특정 분야 전공 또는 관심 청년들이 **글로벌 인재로 성장**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**해외 봉사·일경험 사업 지속 확대** (22년 2.7천명 → 23년 4.5천명)

참여 유형	주요 내용
해외인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해외공관)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▶ (국제기구)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, 충남비 지역기구 인턴 ▶ (농업분야) 농식품분야 해외인턴, 청년 해외개척단, 농업기술 연구원 ▶ (산림분야) 해외 산림 청년인턴 ▶ (건설분야)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
국제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민간협업)·환상기업·인턴 ▶ WFK 및 KOICA 봉사단 ▶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

VI. 향후계획

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반영

- '23년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수정안 주요 변경사항 반영
 - 기본계획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한 **세부 추진계획 마련**
- 연도별 청년정책 **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**시 기본계획 목표 달성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
- **정부업무평가**에 청년세대 소통 노력 및 **청년정책 추진실적·성과** 반영 추진

② 정책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

-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**정기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 수정·보완**
- 청년에게 필요한 **신규 정책**을 지속적으로 **발굴**하고 개선

③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·소통 활성화

- 온·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**적극적 홍보** 실시, 정책 **인지도**와 **체감도·만족도** 제고
 - 청년에게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통해 **시기별·타겟별 맞춤형 홍보**
- **청년과의 소통 확대** 및 **참여 활성화**를 통해 **청년 의견** 지속 수렴, 새로운 **정책수요** 발굴 및 개선

- 37 -

III. 교육

과 제 명	주요부처
1.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	
1-1. 핵심 첨단분야 법정부 인재양성 기반 구축	교육부
1-2.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	교육부 등
1-3. 부처별 특화분야 인재양성 지속 추진	교육부·환경부·문체부 등
1-4. 대학의 핵심인재 양성 허브역할 강화	교육부
2. 고른 교육기회 보장	
2-1.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	교육부
2-2.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	교육부
2-3. 지역인재 양성 지원	교육부
3. 교육-일자리 연계 강화	
3-1.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안착 지원	교육부
3-2. 민간협업 맞춤형 청년 직무역량 강화	교육부
3-3.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	교육부·국방부 등
4.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	
4-1. 온라인 지식공유체계(K-MOOC) 강화	교육부
4-2.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	교육부
4-3.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	교육부

IV. 복지·문화

과 제 명	주요부처
1.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	
1-1. 자산형성 지원제도 확대 개편	복지부·금융위 등
1-2. 청년 부채부담 경감	금융위
2.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	
2-1.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	복지부·국토부 등
2-2.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·은둔청년 발굴·지원체계 구축	복지부
2-3.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	여가부
2-4.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	교육부·문체부
2-5. 대중교통비 지원	국토부
3. 청년건강 증진	
3-1.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	복지부
3-2.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	복지부·문체부
4.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	
4-1.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	문체부
4-2.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	문체부
4-3.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	문체부

- 39 -

참고

분야별 중점 추진과제

I. 일자리

과 제 명	주요부처
1.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	
1-1.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	고용부
1-2. 취업역량 제고 지원	고용부·국조실 등
1-3. 청년 재직자 지속 지원	고용부·중기부 등
2.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	
2-1.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	중기부·과기부 등
2-2.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	농식품부·국토부·문체부 등
3. 공정채용 기반 구축·직장 문화 개선	
3-1.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	고용부·권익위 등
3-2.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	고용부·여가부 등
4.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	
4-1.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	고용부
4-2. 청년 노동권익 보장	고용부

II. 주거

과 제 명	주요부처
1. 청년 주택 공급 확대	
1-1.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대폭 확대	국토부
1-2.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	교육부
2.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	
2-1.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	국토부
2-2. 청년 전·월세 부담 완화	국토부
3. 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	
3-1. 고시원·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	국토부
3-2.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	국토부
3-3.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	국토부
4.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	
4-1.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	국토부
4-2. 청년의 지역 안착 + 국가균형발전 도모	국토부·농식품부

- 38 -

V. 참여·권리

과 제 명	주요부처
1.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	
1-1.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대폭 확대	국조실
2-1. 청년 친화적 거버넌스 운영	국조실
2.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	
2-1. 법령·예산 관련 청년정책 지원기반 확대·강화	국조실·법제처
2-2. 근거중심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	국조실·통계청
2-3.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	국조실·행안부
3.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	
3-1. 온·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	국조실
3-2. 청년과 함께 키우는 공동체	행안부·중기부·문체부 등
4.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	
4-1. 노동·금융·주거 청년권익 보호	교육부 등
4-2.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	외교부 등

- 40 -